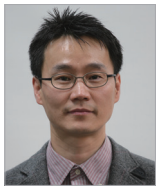
축산물 위생 · 안전관리 강화

정 승 교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
수의사무관
sungkyo77@korea.kr



① 머리말

축산물은 인수공통전염병, 병원성 미생물 등 위해요소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생산단계부터 농산물이나 수산물에 비해 훨씬 까다로운 관리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부패 및 변질에 취약하기 때문에 냉장 또는 냉동 으로 유통되고 특히 닭고기의 경우 도축장에서부터 포장된 상태에서만 판매가 허용된다.

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 가공, 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도입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서도 도축장에서의 위생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에서도 선진국 수준으로 도축장 위생수준을 끌어 올리기 위해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종합대책(2004)", "도축장 위생관리 강화 대책(2011)"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도축장에 대한 HACCP 적용을 의무화하고 매년 HACCP 운용수준을 평가하여 도축장별 등급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언론에서 수시로 도축장이나 축산물의 위생관리 문제점을 지적 · 보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1. 축산물 위생관련 최근 언론보도 내용

보도일	매체	보도 내용
'12. 9. 2.	JTBC, 미각스캔들	제목 : 순대속 돼지피가 수상하다 내용 : 순대에 사용되는 혈액의 비위생적 유통 등 방송
'13. 2. 22.	채널 A, 이영돈의 먹거리 X-파일	제목 : 병든 소가 팔리고 있다 내용 : 기립불능소 불법 유통 현장 방송
'13. 2. 6.	SBS 8시 뉴스	제목 : 도축장 위생엉망 내용 : 도축장에서 고기를 건설장비로 실어 나르고 바닥에 끌며, 운반차량 지육 미현수 등 방송
'13. 3. 14.	SBS 8시 뉴스	제목 : 다우너, 죽은 소 마구잡이 불법도축 현장 내용 : 다우너 소나 죽은 소 불법도축 방송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축장에서 위생검사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소, 돼지 등 포유류 도축장에서 현재 도축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295명으로

법에 명시된 최소 소요인력인 506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농식품부는 금번에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약처와 협력하여 도축 검사인력 확보를 통한 도축장 위생관리 강화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사업현황과 도축검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의 세부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②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추진사항

정부는 금년 8월1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2차 과제 150개를 확정 · 발표했다.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기본이 바로선 나라' 만들기를 천명한 후 정부는 그간 95개 1차 정상화 과제를 추진해 왔고 그에 이은 후속 과제로서, 지난 4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안전' 분야를 대폭 강화하고 기존 1차 과제에 이어 '실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과제를 집중 보완하여 제2차 150개 과제를 선정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는 국민안전 분야 90개, 기존 1차 과제 9대분야 60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여기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도축검사 인력 충원은 정상화 84번 과제로 제목이 "축산물 위생 · 안전관리 강화"이며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현장 개선과제 중 하나에 포함되어 있다.

③ 축산물 위생 · 안전관리 강화 세부내용

정상화 과제로서 도축장 위생관리 강화는 크게 3가지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도축검사 업무를 보조하는 검사원을 208명 증원(포유류 69, 가금류 139)하는 것이다. 검사원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으로 소, 돼지 등 포유류 도축장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두수별 필요 인력이 195명이나 현재 150명만 근무하고 있다. 농식품부에서는 기재부와 협의하여 내년에 포유류 검사원 50명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 하였으며 현재 국회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또한 2014. 7.1일부터 단계적으로 도계검사 공영화가 시행됨에 따라 닭, 오리 등 가금류 검사원은 현재 도계장에서 근무중인 책임수의사를 전환 채용하거나 신규 채용하여 2016년까지 139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둘째 도축검사관 242명 증원(포유류 166명, 가금류 76명)이다. 포유류 검사관은 311명이 필요하나 현재 145명(46.6%)만 배치 · 운영 중으로 충분한 도축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가금류 검사관은 도계검사 공영화 일정에 맞춰 2014년 43명, 2015년 12명, 2016년 37명이 필요하지만 2014년에 16명만 채용되었다. 현재 식약처, 시도 등 관계기관에서 인력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중이나 예산이나 조직에 반영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셋째 "순회감독제" 도입이다. 현재 시도 소속 검사관이 도축장 위생관리 및 감독을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선출직 자치단체장과 지역정서 등으로 위반사항을 발견해도 경미하게 처리하는 등 우려가 있고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방역활동에 수시로 동원되어 업무에 전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중앙정부 소속 검사관이 정기적으로 도축장을 방문하여 도축검사 및 위생관리가 적절하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순회감독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④ 맺음말

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도축장에 도축검사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을 우선 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도축장 안전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반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인력확보가 담보되지 않을 경우 시작 단계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국민 건강을 지키고 소비자의 사랑과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하고 또한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동안 당연시 되었던 비정상 요소들을 이번 기회에 정상으로 되돌림으로 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국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